

2020. 11. 1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99741?sid=101	
(요약)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현대차-기아차 사례 밝을까 - 양사의 저가 항공사 점유율까지 고려하면 총 625%로 공룡항공사 탄생, 공정위에선 간단한 잣대 예상 - 1999년 공정위는 기아차가 회생불가능 상황이라 판단하여 현대차 인수를 승인	
<p>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시장점유율 60% 이상의 독과점사업자가 탄생하지만 공정위는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사례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보고 예외규정을 적용해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p> <p>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확정되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대상 기업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다.</p> <p>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예컨대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사업자가 탄생하는 경우 자산 매각,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시정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이런 시정조치로도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불허'를 결정한다.</p> <p>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공정위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 193%다. 진에어(대한항공),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 등 양사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고려하면 대한항공은 총 625%를 점유하게 된다. 이른바 '공룡 항공사가 탄생하는 상황인 만큼 공정위로서는 간단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p> <p>공정위가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승인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항공이 스스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핵심 자산 매각, 주요 노선 포기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대한항공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이번 인수 추진의 주요 배경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고, 대한항공 역시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로서도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p> <p>일각에선 공정위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의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따지지 않는다. 회생이 어려운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해당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p>	

<p>이 경우 공정위는 △재무구조 △지급불능 가능성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사 설비 등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게 된다.</p> <p>1999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심사가 대표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 한국 시장 점유율이 승용차 55.6%, 버스 74.2%, 트럭 94.6%로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기아차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며, 현대차의 인수로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3년간 트럭의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을 이하로 유지밖에 없었다.</p> <p>공정위가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한 것도 예외조항 적용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2013~2019년 자본잠식 상태고 △2020년 3월 말 기준 1152억원 규모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렵고 △제주항공 외 인수 희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p> <p>한편 공정위는 이번 대한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 불가 회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p>
--

2020.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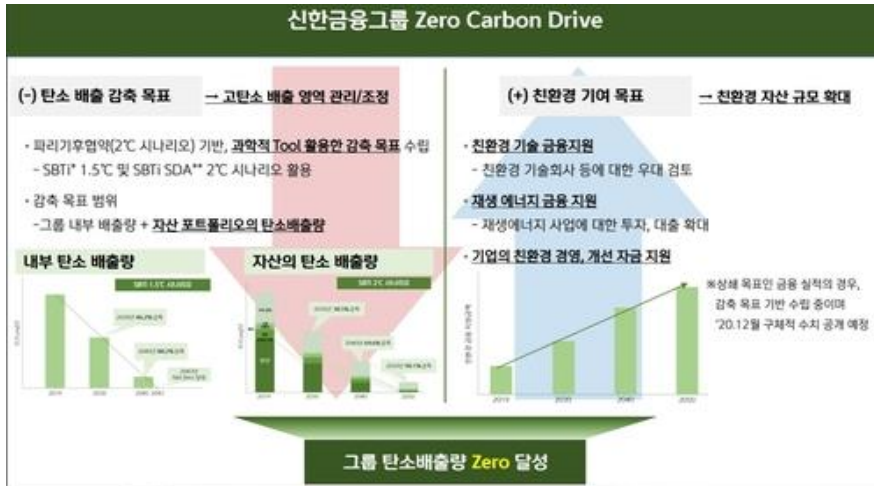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infor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547>

(요약) 신한금융, 탄소제로 선언...2050년까지 달성 목표

-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기후 변화에 따른 친환경 전략인 '제로탄소드라이브'를 선언
- 신한금융은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등 친환경 금융지원 확대



신한금융그룹이 이사회 산하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열고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친환경 전략인 '제로탄소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전략은 국제적인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정책에 발맞춘 신한금융만의 차별화된 친환경 금융 전략이다.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향후 신한금융은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SBTi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 자체적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6%, 2040년 88%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은 2030년 38%, 2040년 69%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기업·산업에 대한 친환경 설비 전환 등 친환경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신한금융은 국내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 총 1천42개를 대상으로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탄소배출량을 산출 및 관리하는 DB를 구축했다.

앞으로 제로탄소드라이브의 과학적 추진을 위해 '탄소회계 금융협회(PCAF)'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해 그룹의 탄소배출량 측정 모형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SBTi, PCAF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친환경 금융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의 필수적 역할"이라며,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룹의 미션 아래, 신한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 11. 1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한국경제

[기사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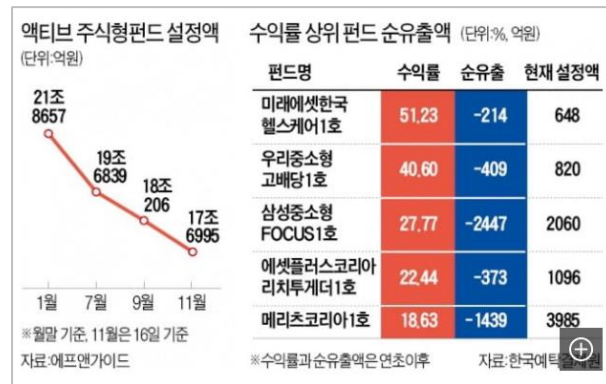
(요약) 존라·강방천도 못 피했다...증시 호황인데 펀드는 '최악의 위기'

-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펀드산업은 판매행렬에 따른 자금유출로 인해 최악의 위기
- 잇따른 펀드 판매연기 및 원금손실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직접투자로 전환하며 펀드 자체의 상품 선호도 하락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는 10년만의 호황을 맞이했다. 코스피지수가 2010년부터 이어져오던 박스권을 돌파해 2500까지 넘어섰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률과 관계없이 펀드가 해지되며 급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매행렬은 동학개미의 멘토로 알려진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운용하는 펀드도 비껴가지 못했다.



◆올해 4조1600억 순유출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 연초이후 4조1662억원이 순유출됐다. 이달에만 1817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 1월 21조8657이던 설정액도 16일 17조8812억원까지 줄었다.

펀드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

이 정도의 위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실현을 하려는 물량과 직접투자로 넘어가려는 물량이 맞물리면서 유례 없는 판매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거듭할수록 펀드 해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실현한 펀드 가입자중 상당수가 직접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수가 상승하고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펀드산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수익률이 최상위권 펀드에서도 판매행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연초대비 설정액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인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1호가 대표적이다. 이 펀드는 연초이후 51.23%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연초 800억원이 넘던 설정액은 64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배당주 펀드 수익률 1위인 우리중소형고배당1호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연초이후 40.6%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지만 연초 1229억원이던 설정액은 820억원까지 감소했다.

동학개미 멘토로 알려진 존 리 대표 펀드인 메리츠코리아1호도 올해 1439억원이 순유출됐다. 현재 설정액은 3985억원으로 줄었다. 강방천 회장의 대표펀드인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1호도 373억원이 유출됐다. 현재 설정액이 1096억원으로 이 속도라면 1000억원이 깨지면서 ‘군소펀드’로 전락할 위기다. 이 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22.44%로 액티브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인 10.81%를 두배 이상 웃돈다. 메리츠코리아1호의 수익률은 18.63%다.

◆“고사위기 펀드도 속출”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 밑으로 내려가며 존립이 위태로운 펀드도 나타나고 있다.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주펀드가 그 사례다. 이 펀드는 2018년부터 액티브주식형펀드 수익률 최상위 명단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수익률도 29.18%로 시장평균을 3배 가까이 웃돈다. 하지만 연초이후 132억원이 빠져나가며 설정액이 8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판매가 한꺼번에 집중될 경우 펀드도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매니저들의 전언이다. 장기투자종목까지 팔아치우며 판매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자금을 집중할 수도 없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도 힘들어진다.

최근 운용사들이 종목들의 지분을 축소하는 이유도 펀드 판매에 있다는 분석이다. 15년 경력의 한 펀드매니저는 “운용사들이 보유 지분을 줄였다고 해당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눈물의 손절’을 하는 물량”이라고 했다.

2020. 11.1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이데일리 기사링크	
(요약) [마켓인]NH투자증권 ARA운용, 파크원 타워2 오피스 매입 완료 - 파크원 타워2 약 1조원에 달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오피스 부동산 거래...NH증권이 면적 1/3 이상 사용 예정 - 대출 7000억 + 에퀴티 4600억으로 구성. 1종 에퀴티 3600억원은 현재 투자 참여 기관 초과 확보한 상태	
<p>NH투자증권(005940)과 ARA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빌딩인 파크원 타워2 매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최초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자로 선정 후 정식 절차에 따라 ARA코리아자산운용에 매수자 지위를 이전했다.</p>	
<div>  <div> <p>파크원 타워2는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올해 최대 규모의 거래다. NH투자증권에서 대출주선 약 7000억원과 에퀴티(Equity)로 약 4600억원을 투자하며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p> <p>NH투자증권이 인수한 에퀴티 4600억원 중 2종 1000억원은 고유자금으로 투자해 펀드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1종 3600억원은 기관 판매 물량으로 현재 투자 참여 기관을 초과 확보했다. ARA코리아자산운용은 책임 운용을 위해 1종 500억원 투자 예정이다.</p> </div> </div> <p>여의도업무권역 소재 파크원 타워2는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파크원 복합단지내 오피스 빌딩 중 하나다. 연면적 16만2217㎡, 53층의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이다. 뛰어난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규모 녹지가 조성돼 있어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p> <p>파크원은 녹색건축인증 1등급 건축물이며,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에너지 설비가 완비되었고, 전용면적활용성이 높은 158㎡의 컬럼프리(Column-free) 설계와 규모 7.0 지진과 조속 70m의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이어졌다.</p> <p>강동현 ARA코리아자산운용 대표는 “NH투자증권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확대해 서울 여의도 권역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랜드마크성의 신규 대규모 복합개발 중 오피스 빌딩인 파크원 타워2를 인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파크원 타워2는 여의도 업무권역내 최고의 위치를 감안할 때 높은 임대 수요가 예상되며 NH투자증권은 총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 예정으로 다양한 우량 임차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p>	

2020. 11. 1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83082/	
(요약) 영광 폐염전의 기적...축구장 100개 규모 태양광 단지로 - 한국중부발전은 전남 영광군 광백태양광 발전단지 현장에서 태양광,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발전단지 준공 - 2MW 규모 염전주민발전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으로 주민갈등을 해결	
<p>소금산업 침체로 문을 닫았던 폐염전이 축구장 100개 크기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 거듭났다. 전남 영광군 폐염전 용지 약 100만㎡에 들어서는 광백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을 마쳤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후반기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태양광 발전의 랜드마크가 완성된 셈이다.</p>	
<p>17일 한국중부발전은 전남 영광군 백수를 하사리 광백태양광 발전단지 현장에서 태양광·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발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인 이번 사업에는 중부발전 에코네트워크 대한그린에너지 교보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대한그린에너지와 한화에너지가 각각 태양광과 ESS 시공을 담당했다. 준공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p>	
<p>광백태양광 발전단지는 현존하는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인 100MW급 설비에 312MWh 용량의 태양광 연계 ESS 설비까지 보유했다. 앞으로 영광군 가구 수의 23배에 해당하는 6만2000여 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연간 139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광백태양광 발전단지 특징 중 하나는 국산 자재를 95% 이상 사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를 제외한 모듈, 구조물과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는 100% 국산 제품을 썼다. 중국산 자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산 기자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p>	
<p>폐염전을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주민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해결했다. 2MW 규모 염전주민발전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날 준공식이 민관 공동 주최로 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p>	
<p>중부발전은 광백태양광 발전단지 외에도 100MW 규모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을 비롯해 고속도로, 산업단지 지붕, 수면, 염해용지 등 유휴용지를 활용한 다수의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8%발전 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2020. 11. 1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797861>

(요약) 정부, 가동중단 ESS 사업장에 손실보전

- 산업부는 지난해 1월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 가동을 멈추길 권고
-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초부터 정부 권고를 받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가동을 중단해 손실을 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손실 보전 신청을 받는다.

손실 보전은 전기료 할인 특례를 가동 중단 기간만큼 연장하고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 가동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ESS 화재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별도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는 사업장(공장 등) ESS 등이다. 다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가동중단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20. 11. 1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서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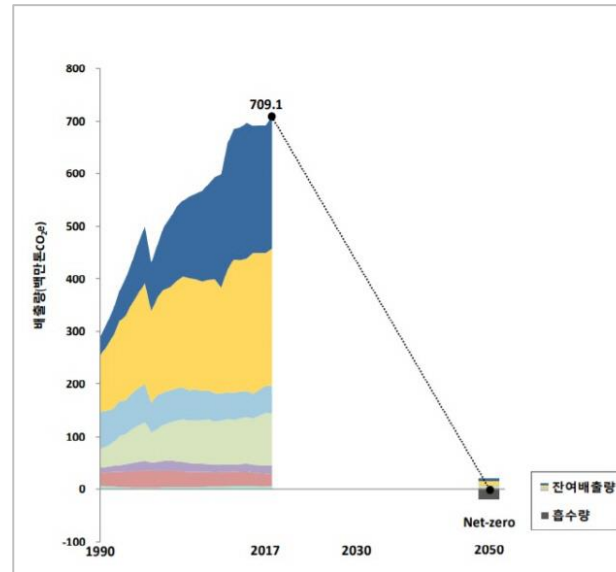
[기사링크](#)

(요약) 정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해 석탄발전 ‘0’으로 낮춘다”

-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없애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목표...탄소중립 기존계획보다 상향조정
- 구체적인 이행계획 없다는 지적...정부 12월 국무회의 심의 후 UN에 공식 보고서 제출할 계획

저탄소사회비전포럼 제시 안보다 급진 안

기술 중심적이고 구체적 이행계획 없다는 비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0년 동안 석탄발전 비중을 **제로(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검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국무회의 심의 후 유엔(UN)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추가 검토안은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국민 등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내놓은 방안보다 더 진전된 안이다. 먼저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는 시기를 2062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겼다. 여기에 저탄소사회비전 포럼이 정부에 제시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60%를 60~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비중은 44%에서 0%로 대폭 낮췄다.

추가 검토안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대규모 전력망) 구축,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DAC) 기술 확보, 건축물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최적설계, 완전 자율주행차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대책도 수소환원제철 적용 확대, 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도시가스 대체, 건축물 도시가스 대체 등으로 강화했다.

구 분	포럼 1안(17년 대비 75% 감축)	2050 탄소중립(안) 추가 검토안 ※ 향후 정책성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정교화(복수안) 예정
목표	- 2050년 75% 감축(2017년 대비) → 2062년 탄소중립 달성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주요기술	[전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 석탄 발전 비중 4.4% CCUS 38.8백만톤 포집	[전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80% ↑ (강) 석탄 발전 비중 0% (강) LNG 발전→CCUS 연계 (강) 동북아 슈퍼그리드 (新)
	[산업] 수소환원제철 적용 스마트 공장 100% CCUS 활용 에너지 원단위 연 2% 개선	[산업] 수소환원제철 적용 확대 (강)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新) 혁신소재(생물원료 등) 상용화 (新) CCUS 활용 확대 ↑ (강) DAC(대기중 탄소포집) (新)
	[건물] 에너지 절감율 24%(BAU 대비) 고효율 기기 보급 6%(BAU 대비) HEMS 보급 66%, AMI 100% 보급	[건물] 도시가스 대체(→전기·수소) (강) 건축물 녹색건축 전면 확산 (강) 건축물 LCA 기반 최적설계 (新)
	[수송] 친환경차 93%, 내연기관차 7% 자율주행, 인공지능 확산 해운·철도·항공 선진화	[수송] 친환경차 대중화 (강) 교통 수요관리 혁신 (강) 완전 자율주행차 (新)

환경부는 모든 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축을 위해 검토하는 내용이며 향후 정책 성과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정교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술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AC나 CCUS 등과 같은 탄소 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다.

구체적 목표치나 단계별 법제화 방안 없이 행동 없는 선언, 계획 수립만 계속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라며 “30년 뒤의 비전인 2050년 LEDS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LEDS는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제출된 다른 나라 보고서도 구체적인 경로나 세부 이행 계획보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성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와 비전을 정하는 과정이 그동안의 LEDS 보고서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관련 기본 계획 등 법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0. 11.19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서울경제

기사링크

(요약) 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왜 오르지? 얼마까지 오를까?

-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4가지 동력 : ①시중에 돈 넘치고 ②기관투자가 가세 ③디파이 광풍 ④바이든 정책 수혜

-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의 입지와 가격 전망에는 견해가 엇갈리며 전문가들 의견 달라... 안전자산 vs 투가대상

올들어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

(만원)

2600

1400

200

832

656

2000

1월 1일

3월 17일

10월 19일

11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자료:빗썸

'832만원(1월 1일)→1329만원(10월 19일)→2000만원(11월 19일): 비트코인 가격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한 달 만에 50% 올랐고, 올해 첫날과 비교하면 25배로 뛰었다.

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왜 오르지? 얼마까지 오를까?

해석은 분분하다. 대체로 '풍부한 유동성'과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시장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는 분석이 일치한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임박했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펼 것이라는 식의 '거창한' 해석도 따라붙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계 자본시장에 고위험고수익 자산이 부족하다"며 "기관의 관심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대량 공급된 것이 상승세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뒤 3억원을 넘길 수 있다"(씨티은행)는 전망과 "자금 유입이 계속될지 불확실하다"(월스트리트저널)는 시각이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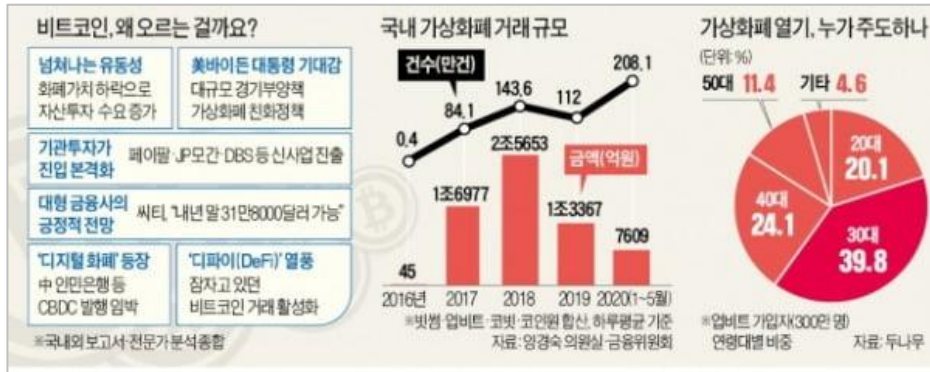
'디지털 화폐'로 안착하는 데 실패한 비트코인은 이번엔 '디지털 자산'으로 포장을 갈아입었다. 비트코인 거래를 개인이 아니라 큰손들이 주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변신'이다. 수익률 면에서 비트코인은 올들어 주식 채권 금 은 구리 등 모든 자산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3년 전의 '코인 광풍'은 사라졌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하루평균 가상화폐 거래액은 2018년 2조5653억원에서 올해 7609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143만6915건에서 208만129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도 거품이다."

비트코인값이 2년10개월 만에 2000만원을 뚫으면서 '왜 오르는지'와 '어디까지 오를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랠리는 비트코인이 점차 자산으로서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점이 반영

됐다"면서도 "향후 비트코인 입지와 가격 전망에는 극단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 “오르는 이유 차고 넘친다”

국내외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비트코인 랠리'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무차별적 돈 풀기'로 가상화폐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는 점도 대형 호재로 작용했다. 페이팔은 새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지원하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국 JP모건, 싱가포르 DBS 등도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예고했다.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한층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뉴스들이다.

가상화폐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며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신종 서비스인 '디파이(DeFi)'의 확산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와 개인의 지갑에서 잠자던 가상화폐를 다시 돌게 했기 때문이다. 세계 디파이 예치금은 지난 9월 89억달러에서 최근 136억달러로 급증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달러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주식양도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비트코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과 씨티은행이 최근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강세장을 이끌 재료는 넘쳐나고 있다.

◆ “가격 폭등하는 안전자산도 있나”

실체가 없는 투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여전히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위험회피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올지는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헤지펀

드 대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츠 최고경영자(CEO)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부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교환 수단인 화폐로 인정받는 데 실패한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재포장된 것"이라며 "자산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딜레마에 빠진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높은 변동성에 돈을 거는 것인데, 안정적인 금융투자 자산으로 대접받으려면 이런 특성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 그 많던 ICO는 감감무소식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인 광풍 당시 스타트업 사이에서 유행했던 가상화폐 공개(ICO)도 여전히 금지다.

붐물을 이뤘던 ICO 사업은 대부분 교착 상태다. 게임 데이터 서비스 스타트업 플레이어원은 2018년 가상화폐 '플레이어원 코인(PLY)' 생태계를 꾸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용자는 게임시간선호게임 등 게임 관련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게임 개발사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PLY를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플레이어원은 2018년 말 ICO를 진행했고, 수십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자금을 모은 이후 플레이어원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차도 '콘텐츠프로토콜 프로젝트'로 ICO를 진행해 약 97억원을 모았으나 지난 2월 돌연 중단했다.

강현정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은 "여러 업체가 ICO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비전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이를 잘 수행한 곳은 보기 힘들다"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기대만큼 확장되지 않았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842991>

(요약) “태양광, 풍력 의존 땀 100조원 더 들어...탈원전 수정해야”

- 한국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에 의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 탄소중립위해 탈원전 정책 수정 필요
- 원전의 특성상 부지 선정, 설계, 건설에 장기간 소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대한 논의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줄이는 동시에 탈(脫)원전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등에 국내 발전량의 60%가량을 맡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비싼 것은 물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한국의 여건상**

태양광 풍력 등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탄소 중립을****실현하려면 탈원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탄소 감축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데다 산업 등 다른 배출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느라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7020만 t으로 전체 배출량의 37%에 이른다.

올초 환경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초안을 발표하면서 2050년엔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내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6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지난해 말 석탄의 발전 비중은 40.4%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5%를 밑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은 일조량과 바람이 적고 산악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은 중국산 설비의 저가 공세에, 풍력은 덴마크 등 선진국의 기술력 우위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국산을 수입해 보급만 늘린다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해도 국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정부 투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비용도 문제다. 지난해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 당 5831 원으로 신재생에너지(kWh 당 9998 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온 산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연간 발전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 조원 이상 될 것"이라며 "저비용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원전뿐"이라고 했다.

탈원전 로드맵상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이 '0'은 아니다.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2079년까지는 원전이 발전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75% 감축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국내 발전량의 약 15%는 원자력이 충당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손 교수는 “원전의 특성상 부지 선정과 설계,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 신규 건설,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탄소 중립 선언과 이행방안 수립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초 발표된 LEDs 초안에는 탄소 중립의 목표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다섯 가지 안이 제시됐다. 최종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하는 최종안은 목표를 대폭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엔 LEDs 최종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의 온라인 국민토론회가 불과 이틀 전 공지되면서 '무늬만 공론화'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0. 11. 2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전자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0&aid=0002913986	
(요약) 현대차, 새만금서 '그린수소'에너지 생산한다...'수소전기차 밸류체인 구축' - 태양광, ESS, 수전해,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한 그린수소 조사, 친환경 그린수소 양산은 국내 최초 - 현대차는 그린 수소사업의 밸류체인 분석과 타당성 검증,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등 참여	
<p>현대차그룹이 새만금개발청과 손잡고 한국 최초로 친환경 수소가스 생산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수소모빌리티를 넘어 수소에너지 생태계까지 조성한다는 전략이다.</p> <p>현대차는 19일 새만금청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 LG전자 등 7개사와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p> <p>이들은 협약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전해 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연계한 그린수소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이르면 내년 중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친환경 그린수소의 양산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p> <p>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물을 전기분해 해 만드는 수소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다. 화석연료를 써서 만드는 그레이수소나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는 블루수소와는 차원이 다르다.</p> <p>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린수소를 생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p> <p>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한다.</p> <p>수소에너지는 공급받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물전기분해(수전해)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전해 시설을 비롯해 통합 수소 생산 플랜트 시설을 구축한다.</p> <p>현대차는 연료전지 기술과 발전 설비를 통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탕으로 전력을 만든다. 현대차증권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조달과 그린 수소 사업의 밸류체인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맡는다. 한국서부발전은 생산된 전력을 다양한 에너지 수요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만금청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돕는다.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p>	

<p>현대차그룹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소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그린수소의 밸류체인을 확보한다는 목표다.</p> <p>또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달성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과 신사업 창출, 새만금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p> <p>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민관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업무 협약은 수소 에너지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태계의 저변 확대 뿐 아니라, 그린수소 보급 확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p> <p>이날 체결식엔 오재혁 현대차 에너지신사업추진실장,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산업개발본부장, 송영선 현대차증권B본부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허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그룹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우섭 수소에너지 대표가 참석했다.</p>
--

